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전체회의

【'25.7.8.(화), 15:00~16:30, 서울 AI 허브】

## 모두발언

동 자료는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실제 현장 발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고학수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협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AI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신기술 발전에 걸맞게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선진화하고  
질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이어온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협의회를 통해  
국제적으로도 아직 초기 논의 수준에 머물러 있던  
▲공개된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AI 파리 서밋(‘25.2.), G7 개인정보 감독기구 회의(‘25.6.) 등  
주요 국제 논의의 장에 공유함으로써,  
국내 AI 정책 성과의 국제적 확산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간의 정책적 경험을 통해 확인한 중요한 사실은,  
신뢰할 수 있는 AI 발전의 선결 조건은  
기술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부작용을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  
이른바 “가드레일(guardrail)”의 구축이라는 점입니다.

적정한 가드레일이 전제된다면,  
“AI 혁신을 위한 프라이버시”와  
“프라이버시를 위한 AI 혁신”이라는 두 과제가  
상호 발전적인 관계 속에서  
기술 수용성과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두 가지 안전을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안전은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진단 및 인증 방안」입니다.

기술의 진보가 빛을 발하려면,  
‘신뢰’라는 기본 원칙이 그 토대가 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 여부는 주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작년 협의회를 통해 마련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은  
AI 모델에 내재한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절차와  
리스크 유형, 경감 조치 등을 안내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진단·측정할 수 있는 기준 제시는  
후속 과제로 유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내 AI 환경에 적합하면서도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정보주체 권리보호까지 보장하는  
프라이버시 리스크 진단·평가 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건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입니다.

생성형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업·기관의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AI 시대 이전 형성된 개인정보 규율 체계는  
생성형 AI가 불러온 변화를 담아내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생성형 AI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고 국민의 불안도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23년도 8월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발표 이후 정립해 온,  
▲AI·데이터 처리 기준, ▲조사·처분 사례,  
▲사전적정성 검토, ▲규제샌드박스 등  
다양한 혁신지원 경험과 함께  
관련한 글로벌 AI·데이터 정책을 종합하여  
이번 안내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안내서에는  
생성형 AI의 수명주기(life-cycle) 각 단계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고려 사항과  
적법성·안전성 확보 기준 등을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실무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생성형 AI 개발·활용에 개인정보 보호 관점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개인정보위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신 의견을 토대로,  
안내서를 수정·보완하여  
7월 말까지 최종 마련할 예정입니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컴퓨팅 인프라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 부문에 축적된 고가치 데이터를  
안전하고 책임 있게, 나아가 사회·경제적으로 ‘최적’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반드시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AI 확산을 선도하기 위한 ▲개인정보 법제 종합 정비,  
▲데이터 활용 불확실성 해소, ▲안전한 활용 기반 마련 등  
합리적이고 유연한 정책 설계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자리에 함께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